

“GMO-FREE ZONE 한국 선언하라”

‘삼각농정 시·군특화사업’ 선정

익산 농업농촌활력화지원센터 설치 등 5개 사업

농진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반대 도민행동, “GMO 개발은 박 탄핵 이후 청산할 대표적 농정적폐”

지난해 식품업계의 뜨거운 화두였던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GMO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와 박근혜의 농정적폐, 정부주도 GMO작물 개발정책 중단하고, GMO-FREE ZONE 대한민국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농진청 주도의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 개발사업은 박근혜 탄핵 이후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농정적폐”라며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1996년 미국에서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러시아와 유럽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GMO를 생산하지 않고, 각국의 정부들은 민간기업의 GMO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행동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농진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안전성을 맹신하며 GMO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

장 정부주도의 GMO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GMO작물 상용화에 앞장서는 농진청 GMO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GMO작물개발사업단은 2011년 2월 설립됐으며 산·학·연을 연계해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2020년까지 ‘국내용 육종소재 GMO작물 5종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까지 긍정적 인식으로 바꿔 놓겠다는 게 농진청의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민행동은 “지금 당장

정부주도의 GMO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GMO작물 상용화에 앞장서는 농진청 GMO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GMO작물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관리감독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후보들은 즉각 농진청의 GMO연구개발의 중단과 GMO-FREE ZONE, 대한민국을 선언해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은 농진청이 GMO작물의 파종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 농진청에서 GMO작물 파종 지지와 농진청 해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도청 3대 핵심시책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 삼각농정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 체계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삼각농정 시·군특화사업’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특화사업은 농업인이 참여하는 시·군 삼각농정협의체 구축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참여·공감형, 다수 농업인(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존 사업신청 방식과 달리 시·군 농정협의체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공모 신청하는 상황식 사업이다.

특화사업은 삼각농정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해 삼각농정 취지의 부합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선정했다.

지난 2월 1차에 공모한 5개 사업은 기존 방식대로 서면 심의로 처리하는 등 시·군의 농정협의체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의체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신청돼 5개 사업 전부 결격 처리됐다.

이후 시·군의 삼각농정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해도 제고로 2차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익산 농업농

촌활력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남원시 귀농·귀촌 소규모 숲터 기반조성사업, 진안군 지역농산물 일시수급 대응을 위한 토굴형 저온저장고사업, 고창군 인삼새싹채소 소득화사업, 부안군 홍합양식 6차산업화육성사업 등이다.

특히, 익산시 ‘농업농촌활력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올해 구성된 농정협의체인 ‘익산시 농정혁신협의회’의 3회에 거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 공모했다.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뒤쳐진 익산시 마을사업, 체험관광, 6차산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업농촌의 활력이 기대된다.

부안군 홍합양식 6차산업화 육성사업은 대항어촌계원 252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사전에 시험 양식 실시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 사업이다.

또한 부안군은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과 양식어업면허 허가 등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지원을 했으며 군 수산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모했다.

대항어촌계와 부안군은 침체된 부안군 수산업이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수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3월 ‘이달의 으뜸도정상’ 시상

전북도는 18일 ‘학이시습의 날’을 통해 지난 3월 한달간 업무성과가 우수한 3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

이번 ‘이달의 으뜸도정상’은 최우수 부서에는 자연재난과, 우수부서에는 일자리경제정책관과 출연기관인 국제교류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자연재난과는 지난 3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함으로써 3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국비 4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18일, 지난 3월 한달간 업무성과가 우수한 3개 부서(최우수 부서에는 자연재난과, 우수부서에는 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기관인 국제교류센터)를 선정해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

‘제3차 전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확정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40.3% 감축 목표

을 반영하고자 도 관련부서, 시·군,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교통봉사단체 등이 포함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수립된 18건의 현장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국토부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지난 2월 14일 확정됨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제3차 전북도 기본계획(안)을 전북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8명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84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2.8명에서 1.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17.1명에서 10.2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 운수산업,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8명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84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2.8명에서 1.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17.1명에서 10.2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 운수산업,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분해 43개 세부 시행대책을 마련하고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시스템 구축, 시내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생활도로 보차도 구분 및 보도개선 사업 등을 선정했다.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취약지역 분석과 중기 목표 설정, 부문별 정책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시행대책, 투자 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5년간 도와 시·군의 교통안전 정책추진 시 활용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AI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

최근 AI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진정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19일부터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 된다.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는 사유로는 지난 4일 충남 논산 발생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대부분의 방역대(166개 중 142개 해제)가 해제됐으며, 잠복기(21일)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철쇄가 북상했고 야생 조류에서 AI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가 진정국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그간 도에서 운영해왔던 재난안전대책본부부속 기축방역대책본부로 전환 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모임은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지만 방역대가 있는 전북도의 경우 5월 10일경 이동 해제시까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한 방역대가 유지되고 있는 익산 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방역대 해제 시까지 지속 운영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 보건환경연, 환경분야 분석능력 우수성 검증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환경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험 먹는물, 수질, 폐기물 분야에서 매우 만족한 평가를 받아 환경분야 분석능력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먹는물 분야는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 5, 농약 2, 휘발성 유기화합물 2,

이온성 물질 및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질 7, 미생물 5항목 등 총 21개 항목을 비롯해 수질은 18개 항목, 폐기물 분야에서 매우 만족한 평가를 받아 환경분야 분석능력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이번 시험은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 5, 농약 2, 휘발성 유기화합물 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